

트럼프 2.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

November 2024



1. 대선 결과 분석

Focus

대선 전체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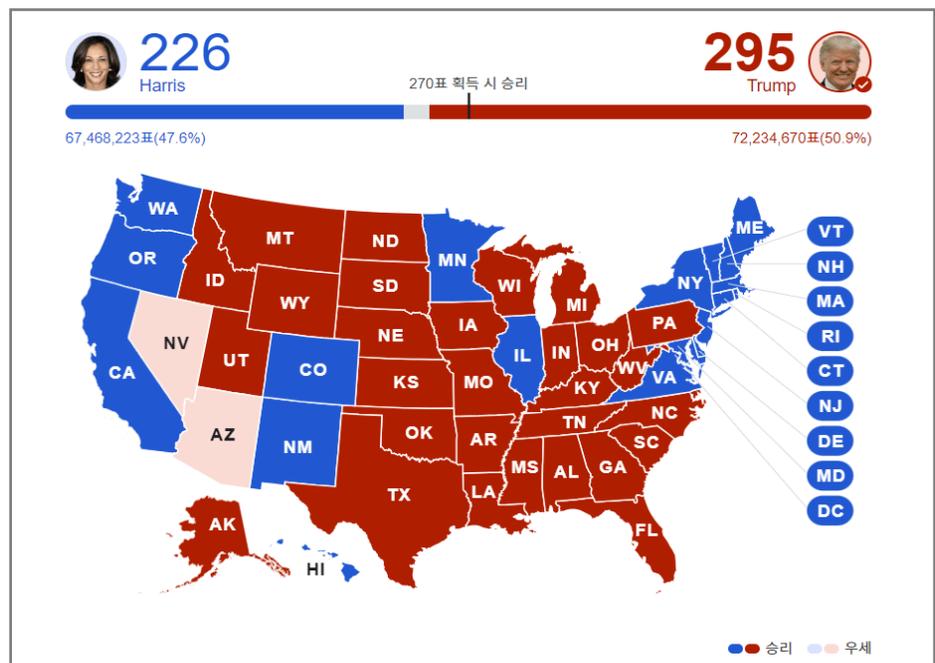
- **트럼프,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美 대통령 당선 확실시**
 - 미국 대선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, 트럼프가 295명 확보 ('24.11.07 오전 10시 기준)해 당선 확정
 - 네바다·애리조나 등에서 개표 결과 나와야 하나, 해리스 패배 승복 발표한 만큼 이변 없을 전망
- **주요 서방언론 희망 섞인 사진 선거예측에도 불구하고, 미국 민심은 트럼프를 최종 선택**
 - 서방 유력 언론들 개표 막판까지 해리스 우세 전망
 - NYT, 이코노미스트 등 해리스 지지 선언('24.10), 선거당일 56%로 해리스 승률 예측
 - 개표 결과,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7개 경합주에서도 모두 트럼프 선택
 - 경합주 7개(트럼프 득표율): 조지아(50.7%), 미시간(49.8%), 노스캐롤라이나(51.1%), 펜실베이니아(50.5%), 위스콘신(49.7%), 애리조나(52.1%)*, 네바다(51.5%)*
 - (*) 현재 개표 진행중('24.11.7)

View Point

- ✓ 글로벌 저성장 지속으로 자국 우선주의 확산되며, 미국인들도 'MAGA*' 강조하는 트럼프 선택
 -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저소득층과 히스패닉도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과 강경 이민 정책 제시한 트럼프로 표심 선회
 - 민주당 강세지역인 블루월 3곳(펜실베이니아, 미시간, 위스콘신)도 제조업 쇠퇴 영향으로 '제조업 르네상스' 약속한 트럼프 선택

* MAGA: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임말로, 미국 우선주의 기조

美 47대 대선 결과 ('24.11.07, 오전 10시 기준)



출처: Associated Press



2.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기조



3不의 시대

예측불가

정책 간 상충*

불확실

게임의 룰

불안정

거시경제/금융시장

* 반이민·고율관세는 인플레이션 유발하며, 트럼프 정부의 저금리·약달러 정책과 상충

* 감세는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과 상충



3. 트럼프 정부 정책 및 한국에의 영향도 점검

1 외교·사회: 미국 국익 최우선

- 강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, 무역장벽 및 안보 유지 부담 높아질 전망



도널드 트럼프 주요 외교/사회 공약

[통상]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조

- 미국 우선주의 강조. 미국 패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에 대한 규제 및 관세 강화
- 양자 협상 및 상호성원칙 고수
 - 양자협상(Bi-Lateral): 다자간 협상이 아닌, 국가간 일대일 협상. 우월한 지위 활용해 미국 이익 극대화
 - 상호성 원칙(Reciprocity) :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에 부과

[기술] 대중국 견제 기조: 디커플링(de-coupling)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철저히 분리

- 중국산 상품에 60% 이상 관세 부과
- 2000년 이후 지속된 중국 MFN(최혜국 대우) 및 PNTR(항구적 정상무역) 철폐

[안보] 동맹국 역할 및 비용 압박

- 고립주의(Isolationism: 미국 이익 및 안보와 관련 없는 타국 문제 간섭 최소화) 정책 기조
- 동맹국 역할 압박 및 방위비 분담 증액

[대북] 협상통한 문제 해결 의지

- 북-미 관계 개선 및 핵 협상 의지, 다만 북한 대화 거부 시 최대 제재

[이민] 불법이민 강경 정책

- 불법이민 근절위해 국경봉쇄 및 불법이민자 송환. 다만, 합법적 기준 충족 시 이민 장려

한국에 미칠 영향?

Positive

- 북-미 관계 개선 가능성으로 한국 외교 및 안보 상황 완화 가능성

Negative

- 중국 견제 기조 아래, 외교안보·첨단기술 분야 등의 한-중 관계 악화 우려
-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관세, 방위비 증액 등 부담 증가

-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관세 장벽 → 한국 수출 부문 부담 가중
- 친환경 정책 후퇴로 전기차·이차전지·친환경 에너지 타격 vs. 정유화학·원자력은 호재



도널드 트럼프 주요 경제 공약

[무역] 보편·상호적 관세

- 중국산 60%,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 10-20% 보편 관세 부과
- 자동차 100% 관세 등 미국 경제에 방해되는 해외 수입품에 한해 대폭적 관세 인상 예고
- 인상된 관세를 재원으로 관세 국부펀드 조성 → 국부펀드로 미국 발전을 위한 제조업·국방·의료 연구 지원

[기업] 법인세 인하 및 저금리 유도

-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21% (현행) → 15% 인하
- 저금리 유지해 기업 투자 확대

[공급망] 온쇼어링 중심

- 생산거점 미국 회귀하도록 정책화 → 제조대국 도약, 고용 증진 계획
- 행정부 내 '제조업 대사' 신규 임명해 적극적 공장 유치, 리쇼어링 기업 대상 '특구' 신설

[환경] 친환경 정책 후퇴

- 파리기후협정 탈퇴 → 풍력 발전 보조금·전기차 의무화 등 철폐, 원자력 발전 확대
- 화석연료 산업 부흥 및 화석연료 기업 대상 과도한 세금 부담 축소 계획

[산업] CHIPS 유지하나 해외기업 대상 관세 부과

- CHIPS법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조정 및 한국 등 반도체 강국 대상으로 관세 부과 예고

[보조금] IRA 인센티브 폐지 또는 축소

-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
-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(또는 폐지)

[물가] 에너지 가격 인하

- 미국산 석유·천연가스 자원 발굴 집중해 에너지 가격 인하 → 유가 하락, 생산비 감소 유도

한국에 미칠 영향?

Positive

- 친환경 기조 약화로, 정유화학업체 부담 감소. 원자력 확대 시 국내 원전기술 수출 가능
- IRA 폐지에 따라 약가 인하 압력 완화 및 바이오시밀러 확대 유도 → 국내 업체의 시장 확대 기회 증대
- 저금리 유지 정책으로, 기업 투자 활성화

Negative

- 모든 국가에 보편·상호적 관세 부과할 계획으로, 한국 수출 타격 → 한국 20% 보편 관세 부과할 경우, 전체 수출액 448억 달러(63조원) 감소 추산
- 한미 FTA, 미국-캐나다-멕시코 무관세 협정 등 재협상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 증대
-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기조로, 한국 기업의 생산 부담 가중
- IRA 인센티브 축소(폐지) 정책으로 배터리, 전기차, 기계(친환경 에너지 분야) 등 일부 산업 축소 가능

- IRA 축소(폐지) → 전기차·2차전지 성장 제동 vs 제약은 바이오시밀러·CMO 위주 성장 가능
- 화석연료 에너지로의 회귀 → 정유화학 및 원전 호재
- 동맹국간 안보 동맹 약화 → 지정학적 갈등 지속되며, 각국의 국방비 증가로 우주·방위산업 성장

 도널드 트럼프 주요 산업별 공약

주요 분야	주요 정책	한국 영향
반도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HIPS법 변화 예상 • 첨단공정, 지식재산, 인력 수출 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편적 관세 부과 영향으로 부담 증가 • 非미국 국가 CHIPS 지원 조항 수정될 경우, 혜택 축소 가능성
2차전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RA 폐지 또는 축소 •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로 전기차 수요 감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배터리 매출 감소
철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시장 관세 장벽 강화 • 무역 규제 확산 등으로 대미 진출 제약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한국 기업 부담 증가
자동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AFÉ* 연비 규제 최소 수준 완화 또는 폐지 •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 높은 관세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 증가로 대미 자동차 수출 약화
바이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약사 자발적 가격 조정 유도 •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통한 경쟁 강화 • 필수약품 미국 내 생산 유도 위해 관세 조정 및 무역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약가인하 압박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• 한국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(CMO) 기업 사업 확대 기회 • 통상 절차 관련 불확실성 존재
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석연료 규제 철폐로, 화석연료 및 화력발전 관련 기계 장치/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 • 석유 등 전통적 발전원 부흥 정책 관련 수요 증가
화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편/상호적 관세 통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• 석유 개발 및 생산 규제 축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수출 기업 부담 증가 • 화석연료 규제 축소로 석유 기반 제품 등 활성화
우주/방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이나 지원금 미국 방산 업체 지급 • 우주 산업 우위 선점 정책 적극 추진 • 동맹국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러시아-우크라이나향 방산 수출 둔화 • 동맹국간 국방 관련 협력 약화 가능 → 자국 우선주의로 국방비 증가 추세 지속 • 우주분야 첨단 기술 확보 韓기업의 미국 우주 산업 진출 기회 확대
AI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I 행정명령 폐지** 등 빅테크기업 규제 축소 - 일론 머스크 규제혁신위원장 선임 예고 • AI 기업 투자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AI 우위 확보 시, 고성능 AI 기술 확보한 韓기업 반사이익 • 미국 AI 기업 제휴 통한 AI 서비스 기회 확대

(*) CAFÉ: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(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). 기업의 당해 년도 생산 자동차 평균 연비 제한

(**) 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 정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 조치로, 바이든 2023년 11월 발령

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변화 및 영향도

- ▶ 트럼프 선거공약집 'Agenda 47' 및 각종 선거유세 시 언급한 사항,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 고려 시 조세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
- ▶ 현재까지 제시된 조세 정책이 미국 입법부를 통과할 것인지,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■ 법인세

- Tax Cuts and Jobs Act(TCJA, 감세와 일자리 법) 중 법인세 조항 유지 및 과거 만료 조항 일부 복원
 - '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(과거 35% → 현행 21%) 조항 유지
 - 특정 설비투자*에 대한 Bonus Depreciation 조항('22년 말 만료) 복원
 - (*) 미국 내 생산 기업의 중장비 및 기타장비(Heavy Machinery and Other Equipment)
-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%에서 20%로 1%p 인하
 -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은 15%까지 추가로 인하
- Inflation Reduction Acts(IRA) 철폐 내지 축소
-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금 부과

■ 관세

-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~20% 추가 부과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% 추가 부과
- 트럼프 상호무역법(Trump Reciprocal Trade Act)을 통해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 부과
- 무역 결제통화로 달러 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게 관세 100% 추가 부과
- 멕시코산 차량 및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제조업체에 100% 추가 관세 부과

■ 국제조세(공화당 정책)

- Global Intangible Low-Taxed Income(GILTI): '26년 유효세율 13.125% → 12.5%로 인상폭 완화
-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(FDII): '26년 유효세율 16.4% → 12.5%로 인상폭 완화
- Base Erosion and Anti-Abuse Tax(BEAT): 현행 유효세율 10.5% → '26년 기준 12.5%로 인상 유지

GIL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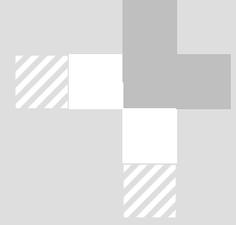
미국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

FDII

미국기업이 창출한 해외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

BEAT

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미국 자회사 등이 해외 모회사 등 관계사에 지급하는 특정 비용에 대해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불인정하여 최소 10%의 유효세율이 되도록 하는 제도.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는 SHIELD 규칙을 도입하여 폐지하고자 함



■ 미국 현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 예상(법인세·국제조세)

법인세	연방 법인세율 인하(21% → 20%)로 미국 현지 진출법인의 세부담 완화
	특히, 제조기업의 경우 추가 인하 법인세율(15%) 적용을 위해 미국 노동자 고용 유인 확대
GILTI	현행(10.5%) 대비 높아지는 GILTI 유효세율로 인해 미국지주회사를 통한 북미·중남미 투자구조를 가진 국내 글로벌기업의 경우, 세부담 증가 예상
	그러나 유효세율 인상폭이 이전보다 축소된다면 ('26년 유효세율 13.125% → 12.5%) 세부담 증가 정도가 일부 경감될 수 있음
FDII	현행(13.125%) 대비 높아지는 FDII 유효세율로 인해 미국거점을 통한 해외 수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, 수출구조의 세무 효율성 저하 예상
	그러나 유효세율 인상폭이 이전보다 축소되거나 현행보다 낮아진다면 ('26년 유효세율 16.4% → 12.5%)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
IRA 축소	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기업 보조금 축소·폐지로 실적 하락 가능성
기타	Bonus 감가상각 조항 복원으로 현지 생산법인의 설비투자 유인 확대

(*) 상기 세율은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조세정책에 따라 가변적이며, 확정치가 아님에 주의

■ 미국향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예상(관세)

보편 관세	모든 수입품에 10~20%의 보편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 가격인하 및 마진압박 상승
추가 관세	상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각종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

4. 시사점 및 대응방안

- **트럼프 2.0은 기존 대비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적 통상정책으로, 글로벌 공급망 재교란 우려**
 - 트럼프 1.0은 미-중 무역전쟁에 초점을 맞추고, 베트남·인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완화적 정책
 -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에 따라, 트럼프 2.0은 신흥국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전망
 - 이에 따라,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이 재차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

View Point

- ✓ **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 필요**
- 우리기업의 신흥국 통한 원료/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 대상이 될 우려 있는 품목에 대한 재점검 →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 검토
-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혜택 부여 필요

- **미국의 新 통상 조건(한-미 FTA 재협상 등)제시 가능성 증가**

- 미국 무역 적자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% 수준에 불과하나, 증가폭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

View Point

- ✓ **바이든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통상 조건 변화 대비 필요**
- 자동차, 가전 등에 품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

- **금융시장 변동성 증가**

- 트럼프 정부는 약달러-저금리를 지향하나, 시장의 안전자산(달러) 선호 현상 증대로 강달러-고금리 재현 가능

View Point

- ✓ **필요 시 정부의 금융시장 적극적 개입 가능하도록, 면밀한 모니터링과 준비 필요**
- 통화정책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, 부채 관리가 중요
-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, 외환보유고 관리 필요

- **산업 전반 개편**

- 친환경 정책 후퇴로 산업 전반 개편: 친환경 산업(전기차, 대체에너지 등) 약재 vs. 석유화학 및 원자력 호재
-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리쇼어링
-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AI 투자 확대

View Point

- ✓ **한국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회로 활용 가능**
- 화학: 탈중국화 강화에 따라 한국의 반사이익 가능. 친환경 정책 후퇴에 따른 구조조정 시간 획득
- Tech: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 필요
-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강점에 있는 기술이나 부품 수출 기회 모색

Author Contacts

이은영 상무

삼일PwC경영연구원

eunyoung.lee@pwc.com

오선주 수석연구위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sunjoo.oh@pwc.com

김호진 책임연구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hyojin.h.kim@pwc.com

삼일PwC 경영연구원

최재영 경영연구원장

jaeyoung.j.choi@pwc.com

www.pwcconsulting.co.kr

S/N: 2411C-RP-068

© 2024 PwC Consulting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/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,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